

# ‘전국 1호’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누굴 뽑을까

강기정·김영록에 전현직 의원 등 후보군 9명 ‘새판 짜기’  
조별리그 가능성에 합종연횡…청와대 출신 출마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1호 행정통합’ 후보자로 광주·전남에 힘을 실으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6·3지방 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이 전제될 경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따로 뽑은 기준 선거 구조는 사실상 사라지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주·전남 특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2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통합단체장을 노리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군간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을 초청한 오찬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특별시장(가칭) 통합선거 실시를 위한 여론수렴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추진하자는 뜻을 보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장 광주전남통합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15일까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원특례법안’을 제정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별법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국회

를 통과하면 곧바로 민주당과 각 정당은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공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통합단체장 도전 후보로는 더불어

민주당에서만 광주 5명, 전남 4명 등 9명

에 달한다.

광주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을·2선), 문인 광주 북구청장,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초선),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의원(담양·합평·영광·장성·4선), 신정훈

의원(나주·화순·3선), 주철현 의원(여수

갑·2선)이 후보군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후광’을 업은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참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상 첫 선거에서 후보 1인이 광주·전남 초광역지역 지지를 오롯이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광주·전남 후보간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조광역 선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후보는 일찌감치 출마를 재고할 수도 있다. 유권자 수는 약 275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선거운동 범위도 광주시 5개구와 전남 22

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다. 조직과 자금, 인지도 모두를 갖추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부 후보가 중도에 출마를 접거나 결선 단계에서

후보간 단일화나 연대가 시도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기존 지역 기반 중심의 선

거 방식보다 광주·전남 전역에서 통할 수

있는 인물 경쟁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미 공표한 ‘억울한 컷오프는 없다’는 방침에 따라 후보가 6명 이상인 만큼 경선도 조별리그 가능성도 높다.

조별리그 경선률에 따라 1~2차에서 차례로 낙마한 후보들이 이후 생존 후보 중 어떤 후보와 연대하거나에 따라 판세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 등 세 권역으로 크게 분류되는 광주·전남 정치지향상 ‘남극지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정부 정책과의 호흡이 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반대로 인지도가 낮거나 지역 한

쪽에 기반이 치우친 후보들은 불리한 구도에 놓일 수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 맞는 전혀 다른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행정체계로 선거를 치러온 지 40년 가까이 된 만큼, 통합단체장 선거는 지역 정치 자체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이미 판이 훈들리기 시작했다”며 “통합단체장 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광주·전남 정치 구조를 다시 짜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전남 대통합 합의문 발표…특별시 출범 급물살

재정 지원 등 6가지 합의  
시민 공감대 확산 토론회도  
“내달 특별법 통과해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발행 표문을 읽은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념사진은 김기현 기자 bluesk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 이후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 시장과 김 시사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최적의 통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총 6가지 항목이 담겼다. 우선 통합광역지방정부는 특별시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으며, 행정통합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 행정권 한 이양을 포함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 무안에 있는 각 시·도청은 그대로 존치하는 가운데 ‘통합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도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회와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권역

별로 신속하게 개최하거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 마련된 행정통합 관련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개 교육청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15일로 열리며, 특례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 중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오는 16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목포대와 통합 재투표 여부  
순천대, 설문조사로 결정

## 통합 이후에도 전남 현안은 계속 간다

국립의대·군공항 이전…이 대통령 “손해 없게 하겠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제기됐던 전남 핵심 현안의 동력 약화 우려가 일단 해소되는 분위기다.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등 전남의 장기 속원 사업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전남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사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모두 통합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이어받아 추진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응

한 맥락이다. 현재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에 대한 재정·정책적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이 역시 통합 이후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통합 지방정부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해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의 구도 약속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남은 과제다. 향후 국회 논의가 예정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립의대 신설과 광주·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특례와 지원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통합이 전남의 속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사는 대통령에게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전남에 국립의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광주·민간공항 이전 문제 역시 비슷

한 맥락이다. 현재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

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에 대한 재정·정책적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이 역시 통합 이후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통합 지방정부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해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의 구도 약속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남은 과제다.

향후 국회

논의가 예정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립의대 신설과 광주·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불이익

를 받지 않도록 관련 특례와 지원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통합이 전남의 속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불이익

를 받지 않도록 관련 특례와 지원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통합이 전남의 속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불이익

를 받지 않도록 관련 특례와 지원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통합이 전남의 속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불이익

를 받지 않도록 관련 특례와 지원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통합이 전남의 속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불이익

를 받지 않도록 관련 특례와 지원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통합이 전남의 속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